

다산포럼

온전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지금의 87년 헌법의 전문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건국강령의 기본 정치철학, 즉 조소앙(1887~1958)의 삼군(三均)주의에서 온 것이다. 삼군주의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정치·경제·교육에서 균등한 권력, 균등한 부, 균등한 교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을 집약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삼군주의 정치 이념을 근간으로 한 헌법을 제정했지만,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자주·민주·균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

해 40여 년 동안 일제의 탄압에 맞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독립운동가들을 배제·탄압함과 동시에 그들의 열망을 담은 제헌헌법의 정신을 무시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친일 관료, 경찰, 군인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했다. 남북한 분단, 전쟁, 그리고 남북한 군사 대결을 빌미로 대통령, 공안기관, 군·경, 관료조직은 특권화되었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가 차단되었으며, 모든 지역 직능단체는 관제조직이 되어 권력과 부의 균등은 멀어졌다.

결국 대한민국은 법·제도·이데올로기에서 미국식 근대의 외양을 지녔지만, 그 속은 조선 시대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습을 그대로 간직한 ‘반쪽 국가’였다. 남북한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반쪽이 아니라 조선시대와 일제 식민지의 유산인 사탕압, 흑백논리, 관준민비, 사법의 정치화, 지방자치의 말살, 자주·복지·평등의 이상을 지닌 진보 정치세력을 배제한 극우 편향 등 근대국가의 기본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쪽인 것이다.

반쪽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은 ‘반의반’만 보장되었다. 정치 이념의 단색화, 검찰 관료가 특권화된 사회에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가는 오직 일류대나 사법 행정고시 출신, 재벌에 우호적인 사람들

이었다. 국민은 오직 선거 때만 주권자이고, 선거만 끝나면 직장이나 마을에서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노동자의 90%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고, 수백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 슈퍼의 ‘갑질’에 맞설 힘이 없다.

그러면 87년 민주화와 두 번의 민주정부는 왜 헌법 전문에서 강조한 균등한 기회, 균등한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했을까? 그것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원칙 하나만으로는 결코 권력의 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자유화는 재벌대기업에게 더 큰 자유를 주자는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 서민의 자유, 기회,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두 민주정부는 공안기관, 검찰, 관료조직, 재벌의 특권을 흔들지 못했고 지역사회에서도 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육성하지 못했다.

오즘 거의 매일 폭로되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모든 것은 바로 제헌헌법, 87년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이승만·박정희의 ‘반쪽 국가, ‘반의반’의 주권 상태의 결과다. 그것은 독재의 유산만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심지어 조선이 남긴 적폐이기도 하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다고 단정하 다음 개헌을 하자고 불을 지핀다. 그러나 내각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질적인 권력 균등을 위해서는 최근 거론되는 검찰 개혁, 비례대표 확대, 선거연령 하향, 지방분권 자치,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제도 활성화, 정당제도 개편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균등한 부와 균등한 교육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적 균등도 공명불이 된다. 미국의 저학력 하층 백인 노동자들은 이민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뺏았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끌려 그를 찍었지만, 투표 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는 억만장자들로만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이들의 무지를 비웃고 있다. 최고 부자나 엘리트들만이 여야 대통령 후보나 상하원 의석을 독점한 미국은 바로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다.

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권력계이트를 겪으면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온전한 국가, 온전한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헌법 제정자임을 자각하고 새 국가 건설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NGO 칼럼

영화 ‘판도라’가 주는 교훈



이 정 운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기술사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한 우리나라 국민은 이에 대한 우려가 반(反)원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70% 전후의 원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수백조원의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이 계속 투입될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재앙적인 모습들은 원전에 대한 공포를 자아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당국의 대응 또한 친(親) 원전 정책에 익숙한 탓인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부실한 심사과정과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일방 통과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다수호기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 6호기 건설인허가 승인, 제대로 된 단층조사도 안 된 사실과 원전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내진성능’이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0.3g 지반가속도 수준의 원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경주지진대책 등이 그것이다.

최근 상영되고 있는 영화 ‘판도라’는 예기치 않은 원전사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원전의 재앙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냉각수를 제어하는 밸브가 지진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냉각이 불능 상태로 치닫고 격납용기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을 그린다.

비합리적인 시나리오 설정이라는 논쟁도 있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처절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적인 모습과 특히 대규모 방사능 사고에도 피신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발

전소장의 중요성과 귀감 적인 모습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영화를 본 관람자들의 반응은 일단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므로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전이므로 탈핵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영화에서 상정한 초기 사고조건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이므로 허구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시각은 원전은 안전하다는 신화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 우려된다. 즉 사소하게 여기지 못한 미세한 사고로 또는 실수가 거대한 사고로 진화될 수 있는 경우를 놓칠 수 있다. 또 하나는 원전은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포기하지는 주장이다. 현재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원전을 두고 탈핵을 꾸꾸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당장 원전가동을 중지할 수 없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

필자는 현장의 사소한 문제에서 대형 사고로 진화될 수 있는 어떠한 가정도 제대로 설정하여 완벽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한 가지로 그러함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태세 또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판도라 영화가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항상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과 만일의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항상 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과다한 공포도 과다한 안전신화도 모두 극복하고 특별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현실을 안고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판도라는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충분하므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권유하는 등 사회적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 고

진실을 포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권 성 옥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주임교수

매년 연초가 되면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덕담보다 정치 관련 사안이 더 많다. 사실과 추측이 얽힌 씁쓸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전 세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이 점차 힘을 발휘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지만, 정치·경제 리더들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리더십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탄핵의 핵심논점 중 하나가 ‘세월호 7시

간’이다. 그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수반에 맞는 리더십 역량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위함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들과 보좌관들의 팔로워십도 예외일 수 없다.

조직발전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는 리더십이다. 하지만 리더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지향할 때, 팔로워들은 리더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때 발휘되는 리더십이 팔로워십이다.

과거에는 리더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더라도 문제없이 작동했지만, 다양한 환경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는 상황이 다르다. 리더보다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현안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리더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10~20%라면, 팔로워의 힘과 역량에 의해 조직의 80~90%가 결정되고 좌우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흥하기는 어려워되

망하기는 더 쉬운 것이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사회에는 오히려 리더의 약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촛불문화와 시민의식이 빛을 발하는 이때, 정치권은 이에 못 따라 가는 것 같다. 청문회를 보면서 ‘저 질문이 저 타이밍에 꼭 해야만 하는 질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기성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세울 거라 생각하던 새내기 정치인들이 구습을 답습할 때 더욱 그렇다. 초록과 동색이 되어가는 이들을 보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로 주목받던 그 시기의 시련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정치인들도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 배치를 가슴에 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한국 정치는 정당정치다. 정치인들도

이 체계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며 국민과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이 관건이다.

하지만 리더와 팔로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조직 내에서 팔로워는 상사에 해당되고 부하직원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리더가 되기에 조직의 구성원은 팔로워와 리더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십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팔로워십이 없이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는 전성터에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팔로워의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보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겪었다면, 그리고 서민의 생활을 경험해 봤다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社 說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광주시의 누적 재정지원금이 지금까지 무려 3000여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편의성 증진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시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결과 과지급된 운송원가 7억60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가운데 광주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할 2015년도 재정 지원금으로 529억 원을 확정했다. 재정 지원금은 운송원가 대비 운송 수입 부족분이다.

문제는 시의 재정 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송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 운송 원가는 꾸준히 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640억 원이었던 운송 원가는 2015년 179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요금과 광고 등 운송 수입은 1290억 원에서 1261억 원으로 오히려 29억 원이 나 줄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광주시가 내년에 정산할 2016년도 재정 지원금도 58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시의 재정 지원금이 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업체의 경영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시민단체와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개선 전담팀’이 꾸려져 표준 운송원가 산정과 시내버스 운송 원가에 대한 투명한 정산 방안 등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 개선 및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업체들은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수익 개선 모델을 창출하고 광주시는 ‘퍼주기’ 식보다는 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맹탕으로 끝난 청문회, 제도 보완 시급하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유명무실한 청문회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 7차 국정조사 특위마저 맹탕 청문회가 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20명의 증인 중 단 4명만이 출석했으며 참고인 4명 중에도 노승일 K스포츠택단 부장만 참석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은 오후에야 나타나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여전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7시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풀기 위한 과정,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비상식적 학사행정, 대통령의 제3차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고리 역할로 기대된 삼성의 지원 과정 등에 대한 마지막 청문회는 맥이 빠지고 말았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특검과 연계해 불출석과 국회모욕죄, 위증죄 등에 대해 단죄할 하도록 항상 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과다한 공포도 과다한 안전신화도 모두 극복하고 특별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현실을 안고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판도라는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충분하므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권유하는 등 사회적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정승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는 끝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청문회가 열렸지만 국정 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의혹만 쌓이고 있다. 다만 시민들의 활발한 제보로 일정 부분 성과가 전혀 없지 않았던 점은 그나마 위안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시작한 이래 60일간 계속된 청문회는 증인들의 모호시 발언과 거짓말 그리고 위증 및 불출석, 청문위원들의 부족한 준비 등으로 인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조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특위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는데 이에 앞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해 10월,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을 찾았다. 한국인론진흥재단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2박3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여러 편의 영화들을 감상했다.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인 감독들의 치열함이 살아 있는 한국 독립영화부터 IS(이슬람 국가) 공격 위의를 연출이 관건이다.

하지만 리더와 팔로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조직 내에서 팔로워는 상사에 해당되고 부하직원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리더가 되기에 조직의 구성원은 팔로워와 리더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십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팔로워십이 없이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는 전성터에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팔로워의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보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겪었다면, 그리고 서민의 생활을 경험해 봤다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진이 직접적인 창작 모티브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영화를 보는 내내 일본 지진이 연상되었다. 인재(人災)였던 ‘세월호’ 참사도 자연스럽게 오버랩됐다.

9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일이 지났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세월호’는 인양되지 않았고, 진실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외면 속에 그 긴 시간에도 유가족들의 극히 일부였다. 더욱이 ‘몇몇 ‘입소문’이 난’ 작품은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된 상태였다.

그 가운데 한 편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이었다. ‘초속 5cm’와 ‘언어의 정원’ 등으로 잘 알려진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의 작품인데 며칠 전, 부산에서 놓치고 아쉬워하던 그 영화를 광주극장에서 봤다.

전작들을 인상적으로 봤던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울림이 있었다. 도쿄와 산골 마을에 사는 두 남녀 청소년의 몸이 뒤바뀌는 판타지적인 스토리에 자연 재해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장엄하게 그려진다. 최근 한국에 온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2011년 동일본 대

영화 ‘너의 이름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